

남북한과 양안의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기초국력 비교

최 창 현 금강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초빙교수

目 次

- I. 들어가는 말
- II. 군사력
 - 1. 남북한 그리고 양안의 군사력 비교
 - 2. 군사력의 생산요소로의 전환 가능성
- III. 경제력
 - 1. 경제력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의 선정
 - 2. 양안과 남북한 경제력 측정
 - 3. 남북한과 양안의 경제력 비교의 시사점
- IV. 기초국력
 - 1. 남·북한 기초국력 비교
- V. 결어: 통일후의 시너지 효과와 한계

I. 들어가는 말

분단국들의 숙명은 항시 긴장관계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분단국간의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면 우선 분단국들의 기초국력,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분단국의 협력에 있어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 기회가 갑작스럽게 주어지게 될 경우, 과연 한국과 대만은 북한과 중국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은 지도자들이라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도, 피해가서도 안 되는 중차대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양안의 국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적어도 종합적으로 볼 때 남한과 북한 그리고 양안의 기초

국력,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라는 물음이 밝혀져야 한다.

한 나라의 국력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는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주어진 운명 과도 같은 것이 있다. 바로 그 나라의 국토, 그 국토에 속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양과 질이다. 이런 요소들은 한 나라가 지닐 수 있는 최대 국력의 크기와 질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나라의 종합 국력을 측정할 때 이것을 국가의 ‘기초 국력’이라고 또는 ‘기본 조건’이라고 부른다.

국토는 크기도 중요하지만, 경작 가능 면적과 같은 질도 중요하다. 인적 자원으로서 인구 역시 총인원수와 같은 양적 규모도 중요하지만 인구의 질적인 측면, 즉 그 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생물학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로 넘쳐나는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본의 공공 연구 기관인 종합연구개발기구(NIRA, National Institute for Research Advancement)가 일본의 종합 국력 연구에 착수하게 된 중요한 배경 중 하나도 바로 일본 인구의 감소 문제와 노령화 문제였다. 우리나라도 이 부분을 크게 우려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물적 자원으로는 석유나 천연가스, 전력과 같은 에너지 자원과 식량 등 기초 생필품들을 얼마나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경제력은 경제 행위를 하는 힘이다. 개인은 보통 재산의 정도를 이르고, 국가나 기업은 생산력이나 축적된 자본 파워를 종합한 힘을 지칭한다. 물질적 풍요가 충족되고 질 높은 삶의 영위가 중요해지면서 선진국은 새로운 경제력 지표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의 하나에서 중진국의 선두 주자로 부상했다. 2014년 IMF가 발표한 한국의 GDP는 세계 13위, GNP는 세계 33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지속적인 성장에 장애가 될 부정적 요인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최창현 · 황성돈, 2014).

군사력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국력의 일부로써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과 역량을 의미한다. 전쟁이 발생하거나 임박했다고 할 경우 국방력은 국력과 거의 동일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국력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특정 국가가 처한 안보 위협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안보 위협이 크면 국방력의 비중이 커져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국방력의 비중이 작아져야 할 것이다. 다만 다수의 국가를 비교할 때 국방력의 비중을 국가마다 다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일된 비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세계적 상황이 전쟁에 의존하는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렇더라도 국방력이 가장 높은 비중을 갖는 분야 중 하나여야 함은 분명하다(최창현, 주성돈, 2015).

남북간과 양안의 긴장이 해소될 경우 군사력의 중요한 요소인 군병력과 국방 예산 등은 경제 등의 다른 분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사전 파악과 비교가 필요하다.

II. 군사력

1. 남북한 그리고 양안의 군사력 비교

국방력 평가에서 사용되는 군사자료의 경우 비밀로 분류된 것이 많아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군사력을 평가하여 발표하는 다양한 자료가 있고, 따라서 이들 중에서 어느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국방력에 관한 자료는, 영국의 IISS(International 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에서 발간하는 Military Balance, 미국의 CIA가 유지하고 있는 World Factbook, 스웨덴의 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에서 발간하는 SIPRI Yearbook: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등이 저명하고, GFP(Global Firepower)에서도 나름대로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중에서도 IISS의 Military Balance에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전통도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년 발간하고, 가장 상세한 내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자료를 종합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일관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는 2014년 연구를 진행하면서 국가 간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 ① 국방비, ② 현역군인의 수, ③ 예비역의 수, ④전차의 수, ⑤대포의 수, ⑥잠수함의 수, ⑦전투함의 수, ⑧전투기의 수, 그리고 ⑨핵전력을 고려하였다. 이것은 2009년 사용하였던 지수에 핵전력 하나만 추가한 것인데, 그것은 2009년 연구와의 비교를 위한 일관성 유지가 필요했던 측면도 있지만, 이 정도의 지표로도 충분한 측면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G20 국가들의 국방력을 비교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7> 국방력 비교(2014)

국가명	군사력지수*		2 국방비(억불)		2.2. 현역 군인(천명)			예비역(천명)			전차(대)		
	지수	순위	수량		수량	지수	순위	수량	지수	순위	수량	지수	순위
대만	0,377	18	107		290			1675			2005		
중국	0,095	3	1617		2,285	80,60	1	1452	47,84	6	6457	86,54	1
한국	0,274	12	338		627	52,84	5	5202	56,75	2	2,654	54,79	5
북한	0,422	23	75		945			5500			5025		
미국	0,086	1	5878		1373			990			5884		

국가명	자주포(대) Self-propelled Artillery			잠수함(정)			구축함 Destroyer			전투기(대) Fighter/Interceptor			핵전력(핵탄수)		
	수량	지수	순위	수량	지수	순위	수량	지수	순위	수량	지수	순위	수량	지수	순위
대만	1160			4			4			286					
중국	1710	72,29	1	68	71,42	2	35	69,67	2	1271	72,08	2	250	47,57	4
한국	1990	68,64	2	15	52,91	4	12	173	5	406	49,99	6	0	46,56	7
북한	2250			76			0	240		458			10		
미국	1933			70			63			2296					

* 2017년 세계 군사력지수(Global Firepower list: Military Strength ranking)는 50여개의 지수로 133개국의 군사력을 측정한 군사력 지수임.

2. 군사력의 생산요소로의 전환 가능성

남북간 경제 교류의 일환으로 장기적으로는 앞서 살펴본 북한의 막대한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우선 남북한의 막강한 군사력을 생산성 향상에 투입하는 방안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생산의 3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노동 측면에서 보면 군인수로는 중국 229만명, 인도 140만명, 미국 137만명에 이어 북한이 95만만명으로 4위이다. 한국은 약 63만명으로 7위에 해당된다. 더 중요한 점은 인구 대비 군인수이다. 인구 천명당 세계 각국의 평균 군인수는 4.1명에 불과하나, 북한은 인구 천명당 군인수가 47.4명으로 1위이고 한국은 12.4명으로 10위이다(IIS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13).

만일 남북한간의 평화 무드가 조성될 경우 인구 천명당 군인비율이 세계 평균 수준인 4.1

명으로 줄이면 군인 약 40만명이 감소될 수 있다.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40대 중장년층은 81.3%, 50대는 77.6%로 노동의 고령화 현상에 직면해 있다. 군인 수 40만명의 감축은 40만명이나 되는 20대 초반의 젊은 경제활동 간용 인구가 생긴다는 의미이다.

둘째 자본 측면에서 살펴보면 Standard & Poors와 무디스의 평가는 독일, 호주, 싱가포르 등이 AAA, 그 다음 미국과 홍콩 등이 AA+, 그리고 한국이 AA, 대만이 AA-, 일본이 A+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은 남북 긴장상태로 한국의 주가 가치를 낮게 책정하는 Korea Risk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지만 평화무드가 조성된다면 주가는 더 오를 것이다. 즉 자본 측면에서 금리는 인하하고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셋째로 토지 측면에서 2016년 전국 총 지가가 6천 981조원으로 추계되고 있는데 국토의 5.1%가 군사용으로 약 350조 가치이다. 만일 군사용 토지를 반으로 줄이면 약 175조 정도가 경제적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 요소로 전환 투입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현 남북한의 막대한 국방예산 중 일부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 요소로 전환 투입될 수 있을 것이다.

III. 경제력

1. 경제력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의 선정

종합국력의 한 구성요소로서의 경제력은 아마도 GDP(국내총생산)나 GNI(국민총소득)를 통해 가장 잘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GDP나 GNI는 한 나라 혹은 국민전체가 생산하여 소비할 수 있는 모든 가치 있는 재화와 용역을 포괄하여 측정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 나라의 GDP 혹은 GNI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생산함수를 제시한다: $Y = F(K, L, A)$. 여기에서 K는 토지, 건물, 기계, 원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물적) 자본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L은 노동력을 나타낸다. 교육·훈련 등을 통해 노동의 질이 좋아지면 같은 노동시간이 투입되더라도 L의 크기는 증가하게 된다. A는 기술력을 나타내는데, 생산요소인 K와 L을 결합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일체의

노하우를 가리킨다. 이러한 생산함수를 통해서 보면,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축적되고, 노동의 양과 질이 증가하고, 기술력이 향상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물적·인적 자본의 축적, 기술의 도입과 개발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적·제도적 요인들이 중요함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GDP와 그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요소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물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투자, 인적 자본의 증가를 자처오는 교육, 기술력을 키우는 연구개발 등은 물론이고, 이러한 투자·교육·연구개발 등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개입방식, 사회적 분위기, 문화, 기업가정신, 국제환경 등도 투입요소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 변수 중 많은 것은 그 성과 내지 크기의 결정에 대하여 경제력이 거꾸로 투입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예컨대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이나 문화에 대한 수요 및 교육·문화의 공급능력이 늘어날 것이다.)

경제력을 결정하는 투입요소 중 많은 것은 중합국력의 다른 구성요소에서 다루어진다. 예컨대 교육력, 과학기술력 등은 중합국력의 주요 구성요소로 별도로 측정된다. 법의 지배, 재산권의 보호, 규제 질, 부패의 통제, 정치적 안정성, 시민의 책임성, 타인에 대한 신뢰, 노사관계, 사회적 통합 등의 요인들도 경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정치력, 문화력, 사회자본력 등의 항목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들 투입 측면의 지표를 제외하고서 산출 측면의 지표를 사용하여 국가들의 경제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GDP나 GNI가 가장 중심적인 산출지표라 하겠지만, 경제의 성장성, 안정성, 소득분배 상태 등을 나타내는 산출지표도 일정 정도 반영하여 경제력 지수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경제력의 남북한 비교를 위해서는 통계자료의 가용성 등을 감안하여 (1) 전체 GDP 혹은 GNI에 가장 큰 가중치를 두고 경제력을 측정하되 (2)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는 정체하고 있거나 느리게 성장하는 경제에 비해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최근 5년간의 성장률을 경제력지수의 계산에 반영하고자 한다.

G20 국가의 경제력 비교 시에는 이 외에도 추가로 (3) 경제의 안정성 내지 건전성을 고려하기 위해 최근 5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4) 소득분배가 얼마나 평등하냐는 사회의 통합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므로 소득분배의 지

니계수를 반영하여 (GDP의 가중치 90.0%, 최근 5년간의 성장률 가중치 5.0%, 최근 5년간의 물가상승률 가중치 2.5%, 소득분배의 지니계수 가중치 2.5%로 하여) 경제력지수를 산출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나 소득분배와 관련한 합당한 통계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여기에서는 현재의 GDP 혹은 GNI 자료와 최근 5년간의 성장률 자료만으로 남북한 경제력을 비교하기로 한다. 한편, 남북한 경제력 비교에 참고가 될 만한 다른 몇 가지 보조지표도 아울러 제시하고자 한다.

2. 양안과 남북한 경제력 측정

북한 국민소득은 북한 스스로가 제대로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 UN, 미국 CIA 등 외부기관들이 추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한국 가격 기준의 명목 GNI를 추정해 발표하고 있는데, 2006년까지는 동 추정치에 한국 환율을 적용해 달러화 표시로 전환한 통계수치를 발표했으나 2007년부터는 한국 원화로만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2013년 북한의 1인당 GNI는 138만원이었다. UN은 북한으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원 표시 통계와 국정환율을 근거로 북한의 국민소득 관련 통계를 작성하다가 2005년 이후는 한국은행 추정치의 추세를 적용하여 작성하고 있다. UN이 추정한 2013년 북한의 1인당 GNI는 622달러였다. 미국 CIA는 구매력평가환율 기준으로 북한의 명목 국민소득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데, 미국 CIA가 추정한 2013년 북한의 1인당 GNI는 1,800달러였다 (문성민 2015 참조).

남북한 경제력 비교를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추계치가 가장 적합한 통계자료로 판단된다. <표 1>은 한국은행이 추계한 1998-2015년 남북한 국민총소득(GNI) 및 경제성장률을 통계이다. 표에 의하면 2015년 남한의 GNI는 1,565조8,155억 원인데 비해 북한의 GNI는 34조5,120억 원으로서 그 비율은 100:2.2로 계산된다. 즉 남한의 경제규모는 북한의 약 45배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된다. 한편 2015년 남한의 1인당 GNI는 3,093만원인 데 비해 북한의 1인당 GNI는 139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5년간의 경제성장률을 남북한 간에 비교해보면 남한의 경우 2011-2015년 동안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보인데 비해 북한의 같은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0.6%이었다. 북한은 그 이전에도 그래왔듯이 최근까지도 남한보다 현저히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표 6〉 남북한 국민총소득(GNI) 및 경제성장률

연도	남한			북한			대만		중국	
	명목GNI (남한 십억원)	1인당GNI (남한 만원)	경제성장률 (%)	명목GNI (남한 십억원)	1인당GNI (남한 만원)	경제성장률 (%)	1인당GNI (불)	경제성장률 (%)	1인당GNI (불)	경제성장률 (%)
1998	517,262.1	1,117.5	-5.5	17,597.2	78.7	-0.9	12934	4.2	828	7.8
1999	570,154.8	1,223.1	11.3	18,741.0	83.3	6.1	13947	6.7	872	7.6
2000	630,614.3	1,341.5	8.9	18,977.9	83.6	0.4	15142	6.4	959	8.4
2001	683,447.1	1,443.2	4.5	20,287.0	88.6	3.8	13703	-1.3	1053	8.3
2002	758,862.6	1,593.5	7.4	21,330.7	92.4	1.2	14062	5.6	1150	9.1
2003	807,778.0	1,687.8	2.9	21,946.6	94.4	1.8	14544	4.1	1293	10
2004	874,238.7	1,819.8	4.9	23,767.1	101.5	2.1	15879	6.5	1513	10.1
2005	912,608.6	1,895.8	3.9	24,791.6	105.2	3.8	16930	5.4	1766	11.3
2006	962,446.6	1,989.7	5.2	24,429.2	103.0	-1.0	17446	5.6	2111	12.7
2007	1,040,091.8	2,140.2	5.5	24,826.8	104.1	-1.2	18256	6.5	2703	14.2
2008	1,104,414.3	2,256.3	2.8	27,347.2	114.3	3.1	18564	0.7	3467	9.6
2009	1,148,981.8	2,336.2	0.7	28,634.6	119.0	-0.9	17531	-1.6	3838	9.2
2010	1,266,579.8	2,563.4	6.5	30,048.7	124.2	-0.5	19864	10.6	4524	10.6
2011	1,340,529.8	2,692.9	3.7	32,438.3	133.4	0.8	21507	3.8	5583	9.5
2012	1,391,595.5	2,782.9	2.3	33,479.0	137.1	1.3	21967	2.1	6329	7.9
2013	1,439,644.4	2,866.7	2.9	33,844.0	137.9	1.1	22526	2.2	7081	7.8
2014	1,490,763.9	2,956.5	3.3	34,236.0	138.8	1.0	23330	4.0	7702	7.3
2015	1,565,815.5	3,093.5	2.6	34,512.0	139.3	-1.1	23109	0.8	8167	6.9

출처: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국민계정

양안간에 비교해보면 1인당GNI (불)는 대만이 중국보다 약 3배나 높다. 최근 5년간의 경제성장률을 대만의 경우 2011-2015년 동안 연평균 2.58%의 성장률을 보인데 비해 중국의 같은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7.88%이었다. 대만은 최근까지 중국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중국의 경제력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다음으로 2015년 기준 남북한의 여타 주요지표를 비교해보기로 한다 (통계청, 주요남북한 지표 참조). 남한의 인구는 5,102만 명으로 북한 인구 2,479만 명의 2.06배이다. 남한의 무역총액은 9,633억 달러로서 북한 무역총액 63억 달러의 154배이고, 남한의 원유도입량은 10억2,611만 배럴로 북한 원유도입량 389만 배럴의 264배이다. 남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485만 M/T(metric ton)으로서 북한 451만 M/T의 1.07배이고, 남한의 철광석 생산량은 45만 M/T으로서 북한 생산량 491만 M/T의 0.09배이다. 남한의 시멘트 생산량은 5,204만

M/T으로서 북한 생산량 670만 M/T의 7.8배이고, 남한의 화학비료 생산량은 198만 M/T으로서 북한 생산량 53만 M/T의 3.7배이다.

3. 남북한과 양안의 경제력 비교의 시사점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추계에 의하면 2015년 남한의 GNI는 1,565조8,155억 원인데 비해 북한의 GNI는 34조5,120억 원으로서 그 비율은 100:2.2로 계산된다. 남한의 2011-2015년 연평균 성장률은 3.0%인데 비해 북한의 같은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0.6%이었다. 북한의 물가상승률은 최근에는 안정되어 가는 것 같지만 2010년경에는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바 있다. 소득분배의 지니계수는 북한의 경우 통계치를 구할 수 없었다. 무역량, 산업생산량 등의 지표로 보아도 북한경제의 상대적 열악성은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우리는 남한의 경제력을 100으로 놓으면 북한의 경제력은 2.2로 평가하고자 한다. 가장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남북한 GNI의 격차를 다른 지표들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만의 경우 1968년 중국의 GNI 보다 10배가 넘는 격차를 보이다 최근에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증가세를 보여 3배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한과 양안의 경제력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은 남북한이 각기 다른 정치 경제 체제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한국과 대만은 자유민주주의와 열린 시장 경제를 채택했는데 비해 북한은 일당 독재체제와 폐쇄적인 계획경제를 채택하였다. 중국은 덩소평이후 개방경제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남북한간의 격차만큼 경제력이 벌어지지 않았다. 향후 자유민주주의와 열린 시장경제에 기초한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는 동북아 나아가 세계에서 우뚝 서는 선진 일류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V. 기초국력

2006년 광물자원공사의 북한 주요 광물자원 현황 자료에 의하면 북한에는 360여종의 지하자원이 있으면 이 중 유용 광물 자원은 200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석회석,

무연탄 유연탄, 마그네사이트 등 4가지 광물만 총 2200조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 금은 세계 1위 남아공의 1/3 가량으로 한국의 50여배로 막대한 잠재적 기초국력을 갖고 있다(최창현, 김명하, 2014)

남한과 북한의 기초 국력을 측정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국토, 인구, 에너지, 식량 측면에서 지표를 설정하였다.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지표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구성한 남북한 국력 비교 지표를 살펴보면, 우선 국토 측면에서는 ① 총면적, ② 경작가능면적, ③ 도시화율, ④ SOC(철도, 도로 총연장과 항만 하역능력, 통신) 등이며, 인구 측면에서는 ① 총인구, ② 65세 이상 인구 비율(노령화 정도), ③ 기대수명, ④ 인구 1000명당 영아사망률, ⑤ 국민건강 정도 등 다섯 가지 지표로 정하였다. 에너지 측면에서는 ① 에너지 자원 확보력, ② 에너지 생산력(발전량,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③ 에너지 기반시설 우수성 등 세 가지를 지표로 하였고, 식량 측면에서는 ① 식량 등 기초 생필품 확보력을 지표로 삼았다.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간한 ‘2016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와 논문 및 연구보고서, 기사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수집·분석하였다. 대만과 중국과의 기초국력은 기본적으로 너무 차이나 비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 남·북한 기초국력 비교

1) 국토

국토 부문에 대한 조사결과 남한을 100점으로 했을 때, 북한의 점수는 평시는 84.7점, 전시는 100.1점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국토 부문에 있어 평시에는 남한이 북한에 비해 약간 더 유리하나 전시에는 남북한이 대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남·북한 간 국토 전체 크기를 남한을 100점으로 했을 때 북한은 123점이고, 경작가능면적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전체 국토면적에 비하면 남한의 비율이 조금 높았다.

도시화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비율로 정의(UN 세계도시화전

망; 통계청, 2016)하는데 북한은 61%로 남한의 82.6%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북한의 도시들의 특징은 김두섭(1995)의 지적처럼 남한의 도시들에 비해 인구규모가 작은 경향을 나타내며, 평양과 같은 중주도시의 편향적인 성장을 들 수 있다. 즉 2016년 현재, 평양의 인구가 287만여명으로 인천광역시 정도의 규모이나 청진이 63만여명, 함흥이 57만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수도인 평양은 다른 시·도에 비해 엄청나게 차별적인 행정적 특혜를 누리고 편향적인 발전을 이루는 동안 중소규모의 도시가 조화롭게 발달하지 못하는 형태의 도시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인구밀도는 전국 평균값이 km²당 201.2명으로 남한의 508.6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인구규모가 남한의 절반에 불과한 데 비해, 면적으로 오히려 23.7%가 더 넓기 때문이다.

중국은 경작가능면적 비율도 대만의 2배가 넘는다.

Romer(2014)는 평시에 도시화 진전은 일하는 사람들 간의 쉽고 잦은 접촉에서 더 높은 소득과 경제성장을 가져온다고 지적하고, 도시에서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다른 노동자와 항상 얼굴을 맞대고 일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들이 지닌 지식과 기술이 서로 빠르게 확산되고 이것이 생산성 증가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도시화가 진척되면 교통과 편의시설이 발달하는 등 풍요로운 사회로 변모하게 되지만, 만약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는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바로 그 예이다.

따라서 평시에는 도시화가 높을수록 국력차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으나, 전시에는 전쟁 상대국의 공격목표가 되고 타격을 당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됨으로 역으로 계산해야 할 것이다.

$$\text{즉, 전시 도시화율 (점수)} = \frac{100}{\frac{a}{b}}, \quad \begin{array}{l} a = \text{한국의 도시화율} \\ b = \text{북한의 도시화율} \end{array}$$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하면 평시의 북한의 도시화율의 점수는 73.8점이 되며, 전시에는

135.4점이 된다.

철도와 도로, 항만시설 등 전통적인 SOC에 통신도 포함시켰다. 통신의 경우 이동전화 가입자 수를 대리측정지표(proxy measure)로 사용하여 비교해 보니 남북한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남한을 100으로 놓았을 때 북한은 철도 총연장은 136.9점, 도로 총연장은 24.3점이며 특히 항만 하역능력에서는 3.6점, 100명당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10.9점으로 격차가 크게 발생했다.

〈표 2〉 국토 부문 국력 비교

세부지표	한국	북한	한국(점수)	북한 (점수)	대만	중국
총면적	100,295km ²	123,138km ²	100	123	35,980	9,596,960
경작가능면적	19,108km ² (19.1%)	19,100km ² (15.5%)	100	100	22.7%	54.7
도시화율	82.6%	61.0%	100	135.4	78.2	59.2
SOC			100	43.9		
- 철도 총연장	3,874km	5,304km	100	136.9	1,613	131,000
- 도로 총연장	107,527km	26,183km	100	24.3	43,365	4,773,500
- 항만 하역능력	1,140,917천톤	41,560천톤	100	3.6		
- 통신(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수)	118.46	12.88	100	10.9	122	107
평균			100	100.6		

자료: 통계청(2016)

2) 인구

인구부문에서 남한을 100점이라 했을 때, 북한의 점수는 53.3점이다. 북한의 각각의 지표 점수를 살펴보면, 총인구 점수는 48.6점, 인구노령화 정도는 66.7점, 기대수명은 86.0점, 영아사망을 등은 12.9점이며 국민건강은 52.4점으로 산정했다.

인구노령화 정도 부문에서, 15세 이상 인구는 남한이 2.22배 많으며, 경제활동인구 또한 1.97배가량 되어 북한의 점수는 각각 46점, 50.6점이 되었다. 15세 이상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인 경제활동참가율이 남한은 62.6%인데 비해 북한은 70.5%로 다소 높은 편이다. 이는 북한이 청소년들의 진학비율에 있어 현저히 떨어짐으로써 장기적으로 고급인력 생산과 경

제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65세 이상 인구비율(노령화)은 남한이 13%, 북한이 10%로써 도시화를 산정 방식과 마찬가지로 역으로 계산하여 북한의 점수는 103.4점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출생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점수는 각각 84.5점과 87.4점이다. 출생시 기대수명은 남한이 북한에 비해 남녀 모두 13년 정도 길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아픈 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한 상태로 보내는 기간을 나타내는 건강기대수명 또한 남한이 북한에 비해 10살 정도 길게 나타났다.

영아사망율 등 부문에서, 정상출산 10만명당 모성사망비는 87명(2013년)으로 북한이 남한에 비해 8.8배, 인구 1,000명당 영아사망율은 19.4명으로 9.24배, 출생아 1,000명당 5세 이하 영유아사망율은 30.2명으로 6배나 높게 나타나 기본적인 수명에 있어 북한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보건의료실태는 2001년 5월 최수현 외부성 부상이 밝힌 통계로도 확인된 바 있다. 최 부상은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5차 아동보호 아시아태평양약각료급회의에서 1993년 대비 1999년 복지지표를 밝혔다. 그에 따르면 북한의 평균수명은 73.2세에서 66.8세로 6.4세 감소했고, 신생아사망률은 1,000명당 14명에서 22.5명으로 8.4% 증가했으며, 5세 이하 영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27명에서 48명으로 21명 증가했다(이철수, 2003: 247, 전현준 외, 2009: 317)). 2016년의 지표는 1999년도의 그것보다 훨씬 나빠져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진행될 경우 더욱더 열악해 질 가능성이 크다.

영유아사망율 등 지표는 앞서 전시장황에서의 도시화율과 같은 방식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낮은 점수를 배정하였다. 즉, 남한을 100점이라고 했을 경우 북한의 모성사망비는 11.4점, 영아사망율은 10.8점, 5세이하 영유아사망율은 16.6점으로 산정하여 ‘영아사망율 등’은 12.9점으로 산정하였다.

대만과 중국은 국토 부분뿐 아니라 인구 부문에서도 압도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노령화 비율이 낮고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좀 좋다.

〈표 3〉 인구부문 국력 비교

세부지표	남한	북한	남한 (점수)	북한 (점수)	대만	중국
총인구(천명)	51,015	24,779	100	48.6	23,545	1,384,688
인구노령화정도			100	66.7		
- 15세 이상 인구	43,017천명	19,324천명	100	46	22	108,735,847
- 경제활동인구	26,913천명	13,630천명	100	50.6		
- 65세 이상 인구비율 (노령화)	6,569천명 13.2%	2,502천명 10%	100	103.4	338.1	156,105,900
기대수명			100	86.0		
- 출생시 기대수명	남: 79.0세 여: 85.2세	남: 66.0세 여: 72.7세	100	84.5	80	75.8
- 건강 기대수명	73.2세	64세	100	87.4		
영아사망률 등			100	12.9		
- 모성사망비(정상출산 10만명당)	9.9명(2012)	87명(2013)	100	11.4		27
- 영아 사망율인구 1000명당)	2.1	19.4	100	10.8	4.3	11.8
- 5세 이하 영유아 사망률 (출생아 1,000명당)	5명(2011)	30.2명(2011)	100	16.6		
평균			100	53.3		

자료: 통계청(2016)

3) 에너지

에너지 부문에서 국력을 비교했을 때, 남한이 100점이라면 북한은 23.4점으로서 에너지 자원 확보력 측면에서는 42.3점, 에너지 생산력은 6.8점, 에너지기반시설 우수성은 21.0점으로 평가되었다.

에너지 부문에서의 국력을 비교하기 전에 북한의 에너지 실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에너지부족 실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양의석, 2006). 1990년 이후 러시아의 급격한 에너지공급 감소와 중국으로부터의 지원 역시 급감하면서 에너지 수급균형이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서방 세계의 경제적 제재조치와 수입대금 지불능력 상실로 인해 원유수입이 큰 폭 감소하면서 북한의 석유 에너지 사용은 제약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산업가동률이 위축되고, 에너지 생산시설 및 산업설비에 대한 핵심부품이 공급되지 못하게 되면서 북한

경제 파행의 핵심원인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주거 및 건물 난방 시스템이 구식 연소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등 북한 에너지소비 수요는 극도로 억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이 원유지원을 중단한 이후, 석유의 역할은 급격히 감소되었고 자동차 연료처럼 대체가 불가능한 부문만 제외하고 사용이 제한되었다.

북한은 당면한 전력난 해결을 위해 북한은 경제 회생을 위해 만성적인 에너지난 해소를 선결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석탄 증산과 저질탄 이용 확대 방안, 소수력과 풍력, 태양열 등의 에너지원의 다양화, 100~1,000kw급의 중소형 발전소 건설 및 노후화된 설비 개·보수 등의 공급 확대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외화난과 재정난, 원자재난 등의 심각한 경제 파탄으로 인해 새로운 발전소 건설과 설비 도입 등 대체 등 현대화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정오영, 2000).

실제 건설된 중소형 발전소의 개당 평균 발전 능력이 10~20kw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조명과 난방 등 가정용 전력 공급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으나, 산업용 동력으로 이용하기에 미흡한 수준으로 북한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평가된다.

2014년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남한의 1/26 수준(1990년 공급 규모의 46% 수준)에 불과하다. 북한은 석탄과 수력 발전 중심의 에너지 수급구조를 가지고 있어 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높다. 이에 북한은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재생에너지, 특히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¹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즉 함흥청년1호·금야·백두산선군청년2호·예성강4호·5호·3호 수력발전소 등 6건의 일반 CDM 사업과 공업폐수 관련·석탄층 메탄가스 활용 및 제거 계획 등 2건의 프로그램 CDM 사업 등 총 8건의 CDM 사업을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에 공식 등록하였으나, 2016년 6월 당시 배출권 발급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현대경제연구원, 2016).

위와 같은 에너지 분야와 관련한 북한의 개략적인 실상을 바탕으로 에너지 부문 북한의 국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 자원 확보력 측면에서 북한 점수는 0.4점으로 측정했다. 세부지표인 원유도입량

1 교토의정서 상 부속서 I (Annex I) 국가가 비부속서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배출권(CER: Certified Emissions Reduction)을 받아 자국의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은 남한이 1,026,107천배럴로 북한의 3,885천배럴에 비해 264배 많은 양을 기록하고 있다. 비축유는 일평균 순수입액 기준 90일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IEA 권고에 따라, 남한은 2016년 말 기준 107일치의 석유 9,400만배럴을 비축하고 있고², 북한은 전시 대비 3개월치의 원유를 비축해 놓고 있다³.

에너지 생산력 측면에서 보면, 발전전력량은 남한이 5,281억kWh인데 비해 북한은 216억 kWh로 남한이 북한에 비해 27.8배를 기록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⁴ 측면에서 풍력과 태양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2015년 10만kW급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2006년과 2011년에 50세대의 태양열난방살림집 건설이나 강원도 결핵요양소 등 9곳에서 태양열 온실을 완공하였다는 기사를 통해 추정해 볼뿐 구체적인 자료는 나와 있지 않으며 그 생산력은 미미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다만, 벼집, 콩깍지 등의 농업폐기물, 솔잎 등의 임산물, 폐목, 장작 등에서 얻어지는 에너지는 1,260천toe에 불과하다(김경술, 2015).

북한의 전력산업은 석탄화력, 수력 등 부존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전원 구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자력갱생 원칙에 기반하고 있는 무연탄 위주의 화력발전과 국토 전역에 걸쳐 개발된 수력발전, 그를 연결한 송배전시스템 등이 북한의 전력산업을 구성하고 있다. 2014년 기준 북한의 발전설비는 216억kWh로 수력 130억kWh(60.2%), 화력 86억kWh(39.8%)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전설비용량은 남한이 북한에 13배 가량의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북한의 발전설비 이용률⁵을 보면 34.8% 정도 밖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설비의 노후도 심화와 부품부족에 따른 적절한 유지보수의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김

2 | 『서울경제』, 2017.1.11.<http://www.sedaily.com/NewsView/10AS10Z8OM>

3 |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900&num=107694>

4 | 1. (신에너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이른다.
2. (재생에너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이른다.

5 | 발전설비 이용률 = 연간 발전량 ÷ (발전용량 × 24 × 365)

경술, 2015). 수력발전 설비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건설된 지 50년을 초과하는 설비들이 전체 설비의 34.2%에 달하고 있으며, 30년을 초과한 설비들은 전체의 52.5%에 달하고 있다. 전체 설비의 23.8%를 점하고 있는 20년 미만의 설비들도 대부분 북한이 자체의 설비와 기술력으로 건설한 신규 수력들로 잦은 고장, 출력저하 등의 기술적인 문제들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화력발전 설비들의 경우도 1996년에 완공된 12월화력발전소를 제외한 모든 설비가 30년 이상 된 설비들이다. 화력설비들은 전량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으로 건설된 설비들이며, 부품 및 기술지원이 중단된 1990년대 초부터 적절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경과연수에 비해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부품 부족, 저열량탄 사용, 혼소용 증유 부족 등이 오랜 동안 중복되면서 설비 운영여건이 크게 어려운 상황이다.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도 중국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

〈표 4〉 에너지 부문 국력 비교

세부지표	남한	북한	남한(점수)	북한(점수)	대만	중국
에너지 자원 확보력			100	42.3		
- 원유도입량	1,026,107천배럴	3,885천배럴	100	0.4	846	6.71 million bbl/day
- 석유비축량	107일	90일	100	84.1	2,38 million bbl	25.63 billion bbl
에너지 생산력			100	6.8		
- 발전 전력량	5,281억kWh	216억kWh	100	4.1	246.1	5,883 trillion kWh
-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13,293천toe ⁶⁾	1,260천toe	100	9.5		
평균			100	23.4		

자료: 통계청(2016), 한국에너지기술원(2014)

4) 식량

식량 등 기초 생필품 확보력은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옥수수, 콩, 보리 등등 식량작물과 쌀 생산량과 수산물 어획량으로 측정하였다. 북한의 경우 식량작물의 경우 남한의 생산

6) 석유환산톤(Ton of Oil Equivalent(toe)): kl, t, m³, kWh 등 여러가지 단위로 표시되는 각종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Cal)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소문자 toe로 표기).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쌀 생산량과 수산물 어획량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점수는 55.9점으로 측정하였다. 식량 부문에 있어서도 중국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

〈표 5〉 기초 생필품 부문 국력 비교

세부지표	남한	북한	남한 (점수)	북한 (점수)	대만	중국
식량 등 기초 생필품 확보력			100	55.9		
- 쌀 생산량	5,624천M/T	2,016천M/T	100	46.6	1,587	211,090
- 수산물 어획량	3,342천M/T	931천M/T	100	27.9	1,005	81,529

자료: 통계청(2016).

5) 기초국력 종합

4개의 지표를 종합하여 측정 결과 남한을 100점이라고 했을 때, 북한은 58.3점으로 국토 부문(100.6점)을 제외하고는 남한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은 에너지 부문에서 특히 심각한 열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구 부문에서 살펴보았듯 국민들의 기대수명이나 영유아사망율, 국민건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4개의 지표를 종합하여 측정 결과 경제력을 제외하고는 대만에 비해 중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에 있어 국가의 기본 조건 신장과 관련하여 특히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라든가 해외에서의 자원 확보 외교, 그리고 기존 에너지 시스템의 고효율화와 에너지 절약 노력이 실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또한 합계출산율은 감소하나, 의료기술의 발달과 풍부한 영양 섭취함에 따라 기대수명의 증가로 노인이 증가하면서 급속히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출산·고령 사회를 준비한 노후보장 정책 수립 및 다양한 사회 활력 회복 프로젝트들이 중요한 전략적 과제가 된다.

V. 결어: 통일후의 시너지 효과와 한계

북한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와 언어와 문화가 동일한 사실상의 내수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조선족 시장이 열렸을 때 한국 경제 영토가 확장된 것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게 북한시장이다.

우리나라의 내수가 5천만에서 갑자기 3천만이 늘어난 8천만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경제 협력 그리고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통일이 되면 남한의 기술력과 유희 설비를 갖고 북한의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비교적 더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시너지 효과 등으로 기초국력,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 등의 순위가 훨씬 더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 중국의 경우에도 대만의 경제적인 역량이 기세해 현재 미국과 많은 점수차로 2위의 국력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과의 격차를 조금 더 좁히면서 G2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표 6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국력의 예상 변화〉

비교 가능한 국력 요소	G20 국가 중 한국 순위 (2009년-13년)	OECD 37개국 중 한국 순위	OECD 37개국 중 북한 순위	OECD 37개국 중 통일 한국 순위 *
기초국력	13	29	36	19
군사력	8	9	18	4
경제력	11	13	37	6- 9

* 단기적으로는 제시된 순위 (이나 장기적으로는 시너지 효과 등으로 순위가 훨씬 더 올라설 것으로 예상됨)

통일 후 시너지 효과를 내기 전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독일의 통독 과정에서 1990년 초기 동구의 기술자, 엔지니어, 회계사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이 새롭게 부상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서 매우 뒤쳐졌다. 신기술을 익힌 공산권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은 자신의 기술을 사회에 접목시킬 수 없었다.

의사, 선생님과 공무원들도 새로운 기술과 규정을 익히는데 꽤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러나 어느 동구권 나라든 사무직과 숙련된 노동력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고 외부에서 이들의 지위를 위협할 만한 노동력이 많이 유입되지도 않아 내부적으로 경쟁이 없었다는 점

은 큰 이점이었다.

하지만 통일한국에서는 상황이 많이 다를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모습은 통일한국의 북한 출신 사람들의 미래이기도 하다. 북한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종사자들의 대부분은 통일한국에서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면 큰 충격에 빠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한 출신의 의사, 공무원, 선생님, 기술자와 같은 사람은 한국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이론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그 이론을 뒷받침할 기술적인 요소가 심각하게 구식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기술적 격차는 과거 동유럽에서는 훨씬 적었다. 과거 동유럽과 소련의 공산국가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뒤쳐졌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 한국과 북한만큼 괴리가 심하지는 않았다. 북한 중산층 자녀들은 한국 중산층 자녀들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는 이태리처럼 지역적 차이를 넘어 소득의 차이가 먼 미래 세대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https://www.huffingtonpost.kr/nk-news/story_b_8626520.html).

우크라이나가 내분으로 러시아의 침공을 당하는 사태를 보면 이 사태가 우리에게 반면교사역할을 하는 면이 있다. 우크라이나의 예에서 보듯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중국은 자국의 핵심이익 즉, 자국민보호, 자국투자이익보호, 북한 핵무기관리, 북한내 소요사태, 난민사태예방 등의 다양한 이유를 빌미로 조중 자동개입조약을 근거로 미국과 중국이 미리 계획해 놓은 북한 4분할론에 따라 북한의 1/4의 영토에 군사적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중국의 국력이 명실상부한 세계 2위로 올라섰다는 점에서 중국의 개입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는 방안은 조속히 남북간의 관계개선을 통한 외세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 민족의 자주적 통일이다.

참 고 문 헌

- 국가보훈처, 『국력 평가를 통한 국민 호국정신 함양 방안 연구』, 2017.
- 문성민, 「북한 국민소득 통계 소개 및 국제 비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2015.
- 이춘근·김종선·남달리,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현황분석과 협력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 조정아, 「교육통계를 통해 본 북한의 교육」, 『통일연구원』, 2016.
- 통계청,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16.
-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2009
- 최창현, 김명하, 「국정관리력과 평화의 관계 분석」, 『한국보훈논총』, 제13권 제1호, 2014.
- 최창현, 주성돈, 『국력이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 최창현·황성돈, 「소프트파워 종합 국력」, 『2014 한선 종합 국력 지수』, 2014.
- 한국은행, 『국민계정』, <http://ecos.bok.or.kr>.
- 황성돈·신도철 외, 『종합국력: 국가전력기회를 위한 기초자료』, 다산출판사, 2016.
- Education Commission, DPRK, Education For All: National EFA 2015 Review DPR Korea, UNESCO, 2014.
- Hanke Steve H, "North Korea: From Hyperinflation to Dollarization?", Cato
- Institute Commentary, <https://www.cato.org/publications/commentary/north-korea-hyperinflation-dollarization>.
- Wadhams Nick and Sam Kim, "North Korea Can't Stamp Out Its Unofficial Economy",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6-05-06/tinned-peaches-show-north-korean-currency-escaping-r
egime-s-grip](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6-05-06/tinned-peaches-show-north-korean-currency-escaping-regime-s-grip).
- Wikipedia, "List of countries by GDP (PPP) per capita",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
GDP_\(PPP\)_per_capita](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PPP)_per_capita).
- Yale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YCELP), *Yale University and Center for International Earth
Science Information Network (CIESIN)*, Columbia University, 2014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http://epi.yale.edu/files/2014_epi_report.pdf

ABSTRACT**The Comparison of Military, Economic and Fundamental Powers among Korea, North Korea, Taiwan and China**

Choi, ChangHyeon

The fate of the divided nations is to constantly live in the stare of tension. Just in case the divided countries are given the chance to be reunified, to what extent each regime can deal with the opportunity?

It is a very significant question to be answered by the leaders of each nation. And to properly answer this question the leaders of the nations should be prepared to relatively compare the military, economic and fundamental powers among Korea, North Korea, Taiwan and China.

Each and every country of the world efforts to measure national power. However, few researches attempt to conduct comparative analysis among the 4 countries. Most of the nation power index consist of diverse subcomponents such as economic power, military power and fundamental power.

Comparison with diverse countries can suggest weakness and strength of each country. This study will compare to national power of S. Korea and China, and can suggest to future direction of development which S. Korea become strong and influence country in the world.

Key words : Military Power, Economic Power, Fundamental Power, Korea, North Korea, Taiwan and China